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 대형공격헬기가 수행하려는 종심기동작전은 헌법과 국제법 위반!
 -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대형공격헬기는 작전적 효용성 없어!
 -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막대한 운영유지비 등 재정적 효용성 낮아!
- 2023년 예산(정부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1월 28일 147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11월 4일 국방예산 예비심사를 통해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 대해 “적 중심으로 고속 기동하는 기동사단을 실시간 공중 엄호하고 적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집중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공격헬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적기 착수를 위한 예산 10억 900만원 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형공격헬기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종심기동작전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작전이며, 군사적 효용성도 기대할 수 없는 무모한 작전입니다. 또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남한의 헬기전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며, 중복투자와 막대한 운영유지비로 인한 예산만 낭비시킵니다.
- 이에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익을 지키고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1.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작전입니다.
-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은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입체적인 작전을 통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는 작전을 말하며, 국방부는 “공세적 종심 기동전투는 유사시 첨단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개념의 전투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뉴시스, 2018.1.19).
 - 이 같은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은 대북 선제공격이 아니라 남한을 무력 침공한 북한 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한 뒤의 공세작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북한 지도

부와 북한군 괴멸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력통일을 금지한 헌법 5조 위반이며, 유엔 헌장에서 규정하는 자위권을 넘어서 공격국의 영토를 침해하는 불법이며 전시국제법의 원칙을 넘어서는 위법행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1868년)은 “한 국가가 전쟁 중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목적은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병력(부대)의 주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천명했습니다. 적의 주력을 무력화해 승기를 잡은 조건에서는 적을 격멸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살상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 헌법과 국제법 위반하는 공세적 중심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2. 대형공격헬기를 동원한 공세적 중심기동작전은 군사적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는 무모한 작전입니다.

- 언론보도(세계일보, 2021.1.3)에 따르면 군 소식통은 지난해(2020년) 전방 모 부대에서 수리온 헬기에 수색대대와 특공대대를 태워 작전에 투입하는 워게임(War Game)을 진행했다면서 “야간 전술기동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적의 대공포 공격에 취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중심기동작전을 위한 “한국군 단독 공수작전은 초기 피해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중앙일보, 2018.8.26). 이러한 사실들은 공군에 의한 북한 방공망 제압(SEAD)과 제공권 장악 없이 북한 내륙으로 진격할 경우 아군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또한 북한의 조밀한 지대공 능력과 특히 산악지형이 70%에 달하는 한반도 작전지형을 고려하면 남한 헬기의 생존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헬기는 공격용 헬기든 다목적 헬기든 자체 방호력이 취약해 지대공 공격에 취약하다는 결정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격헬기는 타 무기체계에 비해 기상 제약이나 대공화기의 영향이 크”고 “공격헬기는 방공레이더를 식별하는 등 자체 통합생존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레이더를 이용하지 않는 재래식 대공포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공격헬기 운용에 대한 소고」, 『국방논단』, 2021.8.31). 2001년, 미국 보잉사가 한반도에서 공격헬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국방연구원과 실시한 워게임에서 아파치 공격용 헬기는 100% 격추당했습니다(아시아투데이, 2011.4.15).

- 대북 중심작전에 헬기를 투입하는 것은 북한 방공망 제압(SEAD)과 공중지배가 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세적 중심기동작전을 위한 대형공격헬기의 군사적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굳이 대형공격헬기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작전속도에서 전투기를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기보다 저고도에서 작전해야 하므로 전투기의 공대공, 공대지 작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군기에 의해 격추당할 수도 있습니다.
- 군사적 효용성도 매우 낮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3. 남한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헬기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공격헬기 추가 도입은 불필요합니다.

-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 헬기 전력은 660여 대(육·해·공 보유)로 290여 대의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36대의 대형공격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단 1대의 대형공격헬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별도로 남한은 기존 코브라, 500MD 등을 보유하고 있고, 기존 공격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LAH(소형무장헬기)를 개발 중이며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총 200여 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2021년 국회 국방위원회도 2022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형공격헬기 외에도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을 추가로 획득할 예정이며, 대형공격헬기는 이미 항공작전사령부에서 36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48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6대를 획득할 필요성이 적다”고 지적하면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하였습니다.

4.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을 통해 도입될 아파치 헬기는 부품 결함 및 긴 정비시간으로 가동률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도입 기종은 미국의 아파치 헬기 최신 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연합뉴스, 2022.11.28.). 그러나 대형공격헬기 1차 사업을 통해 도입한 AH-64D 아파치 헬기의 핵심 장비인 사격통제레이더(롱보우 레이더)는 많은 결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중앙일보, 2018.10.14).

- 2018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종명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치 헬기 롱보우 레이더가 육상 지역에서 표적을 탐지할 때 거짓표적이 다수 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지역 훈련장에서 실시된 ‘도시지역 항공타격작전 FTX’ 결과 실제 표적은 4개였지만 롱보우 레이더에 탐지된 표적은 101개에 달하며, 산악지역에서는 다수 표적을 동일 표적으로 식별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A 사격장에서 실시된 ‘사격통제레이더 전투능력 검증’ 결과 표적 식별 거리 6km에서 18개의 표적을 9개로 탐지했고, 3~4km에서는 18개를 5개로 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앙일보, 2018.10.14). 이 같은 아파치 헬기의 사격통제레이더 불량은 곧바로 사격 불량으로 이어지며, 상대의 반격으로 격추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또한 “아파치 헬기는 1시간 작전 비행을 위해서는 40시간가량의 정비시간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이라크에서는 대당 운행시간이 1개월간 18시간에 불과”했습니다(경향신문, 2011.3.28). 이러한 사실은 대형공격헬기의 가동률, 곧 전시 작전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5.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운영유지비 등 감당할 수 없는 추가 예산 부담 가능성이 높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소형무장헬기 사업, 상륙공격헬기 사업 등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소형무장헬기 개발 및 양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비 2,000억 원을 포함해 총 8,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상륙공격헬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전적 효용성이 낮은 공격헬기 도입에 국방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 2007년 한국국방연구원 용역보고서는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운영·유지하는 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2015년 이후 본격 운영이 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 대당 연간 운영유지비가 22~28억 원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코브라 헬기 운영유지비의 4배이며, F-16 운영유지비의 24억 원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대형공격헬기 36대가 추가로 도입된다면, AH-64E 운영유지비가 AH-64D와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무려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 유지비로 쏟아 부어야 합니다.(끝)